



저항의 화폐는 어떻게 선택되는가

About

Metanomia는 크립토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연구·분석하는 싱크탱크입니다.

© 2026 Metanomia. All rights reserved.

Researcher

이창준 Changjun Lee

Corresponding Author

오태민 Taemin Oh

Contents

01	들어가며	3
02	저항의 화폐를 다시 정의하기	4
	『저항의 화폐』의 핵심 논증	
	저항의 화폐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기준	
03	제도적 거리와 화폐 권력	7
	가까운 폭군과 먼 제국	
	제도적 거리란 무엇인가	
	화폐 권력의 세 가지 통제 방식	
04	현실의 저항의 화폐	11
	거래 통제에 대한 저항	
	가치 통제에 대한 저항	
	감시 통제에 대한 저항	
05	동적 균형 프레임워크	17
	시간 선호와 거리의 최적화	
	인프라와 공동체	
	권력의 층위와 통제 가능성	
	하나의 정답은 없다	
06	맺음말	23
	주	24

들어가며

화폐는 권력의 언어이자 통제의 도구이며, 때로는 그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의 수단이 된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fiat currency)는 그 국가의 주권과 통치력이 물질화된 형태다. 개인이 그 화폐를 쓴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국가의 경제 질서에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화폐가 약속한 가치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을 때, 개인은 어디로 향하는가?

본 보고서는 ‘저항의 화폐’라는 개념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저항의 화폐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억압이나 실패로부터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선택되는 대안적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비트코인이 탄생한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다.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의 화폐를 피해 자신만의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왔다. 금(金), 외국 화폐, 담배,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토큰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것은 이 저항의 화폐가 하나의 형태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¹⁾은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주권 화폐(sovvereign money)²⁾라고 주장한다. 검열이 불가능하고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어 어떤 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드는 근거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금융 소외 계층에게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그들에게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확신, 즉 미국 달러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³⁾이 더 절실한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데 있지 않다. 저항의 화폐는 특정 자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트코인도, 스테이블코인도, 금도, 현금도, 모네로와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도 그 자체로 저항의 화폐인 것이 아니라, 특정 위협 앞에서 특정 조건의 사람이 쥐었을 때 비로소 저항의 화폐가 된다. 저항의 화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통제 축과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맥락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최적해의 집합이다. ‘비트코인만이 답이다’와 ‘스테이블코인이면 충분하다’는 주장 역시 특정한 통제 축과 사회적 맥락에서만 성립하는 부분적 진실이다. 문제는 ‘어느 화폐가 보편적으로 옳으냐’가 아니다. 누가 어떤 위협 앞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이다.

이 글은 ‘비트코인만이 답이다’라는 입장과 ‘스테이블코인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넘어, 어떤 수단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저항의 화폐로 기능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비트코인이 저항의 화폐로 이해되어 온 논리를 검토한 뒤, 그 개념을 다양한 화폐와 현실의 조건으로 확장한다.

1)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신뢰할 만한 탈중앙 화폐로 보고,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화폐 표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입장. 중앙 주체가 공급을 임의로 늘릴 수 없고 총발행 한도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상적인 ‘경성 화폐(hard money)’로 본다. 견해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자기수탁 가능성을 중시하며 알트코인과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에는 비판적이다. 강한 형태의 맥시멀리즘은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점차 대체하는 ‘하이퍼비트코인화(hyperbitcoinization)’를 전망한다.

2) 주권 화폐(sovvereign money)는 통화·중앙은행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화 주권에 기초하여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보증하는 공적 화폐를 뜻한다. 반면 비트코인 담론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 국가나 은행 등 제3자의 허가나 보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기주권적 화폐(self-sovereign money)’라는 의미로 쓰인다.

3)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1로 가치를 고정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발행사가 같은 액수의 달러·국채를 예치해 가치를 떠받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이 연동이 깨지면(디페깅)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저항의 화폐를 다시 정의하기

『저항의 화폐』의 핵심 논증

‘저항의 화폐(Resistance Money)’라는 개념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대중화되었다. 비트코인을 권력에 맞서는 화폐로 보는 논의는 앤드루 M. 베일리(Andrew M. Bailey)·브래들리 레틀러(Bradley Rettler)·크레이그 워키(Craig Warmke)가 2024년에 출간한 『저항의 화폐(Resistance Money)』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된다.¹

이들은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목적의 저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상과 해커의 수단인 동시에, 검열에 맞서는 반체제 인사와 계좌가 막힌 난민의 수단이기도 하다. 저항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무엇에 저항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저항의 화폐라는 말은 그것이 늘 옳은 일에 쓰인다는 뜻이 아니라, 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을 연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저항 가능성을 ‘신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현대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대체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에 의존한다. 돈을 보관하는 관리자(은행), 거래를 처리하는 중개자(카드사·결제망), 화폐를 만들어 내는 발행자(상업은행·중앙은행)다. 하나의 기관이 여러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금의 안전한 보관과 편리한 결제, 통화의 안정성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실패 지점이 된다. 관리자는 자금을 잃거나 동결할 수 있고, 중개자는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를 차단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발행자는 통화량을 잘못 관리해 화폐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금·외화·현금과 같은 대안적 가치 저장·결제 수단을 살펴보면, 이들 역시 신뢰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금은 특정한 발행자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많은 양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먼 거리로 옮기려면 보관·운송 기관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 달러와 같은 외국 화폐는 자국 통화의 발행자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지만,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과 그 화폐를 구하고 교환하는 유통망에 대한 의존을 남긴다. 현금도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어 관리자와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이 수단들은 신뢰를 완전히 제거했다기보다, 당면한 위험을 피해 신뢰의 대상과 범위를 바꾸거나 줄인 경우에 가깝다.

비트코인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세 역할을 모두 필수적이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중개자 없이 전송할 수 있으며, 신규 발행은 미리 정해진 일정과 2,100만 개의 공급 상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규칙을 바꾸는 일도 단일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요구한다. 저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현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처럼 화폐의 보관·이전·발행을 특정 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 최소화가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과 저항의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저자들이 비트코인을 완성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책은 화폐 제도, 프라이버시, 검열 저항, 금융 포용, 보안과 에너지라는 여러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장점뿐 아니라 비용과 한계도 함께 검토한다.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에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논증은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는 맥시멀리즘과 거리를 둔다.

베일리 등의 논의는 비트코인에 집중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평가 기준은 다른 화폐와 결제 수단을 검토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 밖의 수단들도 기존의 위험을 줄이는 대신 발행자나 수탁 기관, 결제 인프라에 의존하거나 가격 변동성·접근성·규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기준으로 각 수단의 저항 가능성과 한계를 비교한다.

저항의 화폐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기준

대안 화폐란 법정화폐가 아닌 모든 가치 저장·교환 수단을 아우르는 넓은 범주다. 항공사 마일리지나 게임머니,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처럼 일상에 가까운 것부터 금과 외국 화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모바일 머니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법정화폐의 자리를 일부라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이라면 형태를 가리지 않고 대안 화폐인 셈이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 화폐가 저항의 화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가르는 것은 화폐의 형태가 아니라, 통제를 우회해 경제적 자율성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이다. 항공사 마일리지나 게임머니처럼 발행 기업의 폐쇄 생태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수단은, 권력이 통제하려 들 때 기댈 다른 인프라가 없어 저항의 화폐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이 저항의 화폐로 기능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본 보고서는 『저항의 화폐』에서 다룬 신뢰 최소화, 프라이버시, 검열 저항, 금융 포용 등의 논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폐와 결제 수단을 비교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 저항성(power resistance)이다. 화폐가 자산 동결, 압수, 송금 차단, 검열 같은 권력체의 직접 통제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가리킨다. 핵심은 ‘권력이 이 자산을 마음대로 막거나 빼앗을 수 있는가’이다. 비트코인은 자기수탁(self-custody) 지갑⁴⁾에 보관할 경우 은행이나 거래소 같은 접점을 통한 동결이 어려워 권력 저항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다만 비밀키나 기기를 압수당하거나 이전을 강제당하는 경우까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발행사가 존재하는 USDT, USDC⁵⁾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정부 압력에 따라 발행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권력 저항성이 비트코인보다 낮다. 자국 화폐 예금은 계좌 동결과 자본 통제 앞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둘째, 가치 안정성(value stability)이다. 화폐가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 같은 가치 통제로부터 사용자의 구매력을 얼마나 보존하는가를 가리킨다. 핵심은 ‘보유한 화폐의 구매력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가’이다.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단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지만 미국 통화정책 변동에 노출된다. 금은 수천 년에 걸쳐 가치 보존의 표준이 되어 왔으나 일상 결제에는 부적합하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장기 인플레이션에 강하지만 단기 가격 변동성이 크다. 어떤 수단이 가치 안정성을 갖추는가는 사용자가 보존하려는 시간 지평에 따라 달라진다.

4) 사용자가 거래소나 수탁기관 같은 제3자에게 자산의 보관을 맡기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권한을 부여하는 비밀키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 비밀키와 복구 수단을 모두 잃으면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책임을 개인이 지는 대신, 제3의 기관이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5) 각각 테더(Tether)사와 서클(Circle)사가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2026년 중반 기준 둘을 합치면 전체 스테이블코인 공급의 80%를 넘는다.

- 6) 실명이 아닌 가명(주소)으로 거래하는 성질. 익명성과 달리 모든 거래가 공개 원장에 남기 때문에, 한 주소가 특정 인물과 연결되는 순간 과거 거래까지 역추적될 수 있다.
- 7) 거래 기록을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보관·검증하는 분산 장부(블록체인).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가 이 공개 원장에 기록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8) 거래 당사자와 금액 등 블록체인 상의 정보를 숨기거나 추적하기 어렵게 설계된 암호화폐. 모네로는 송신자·수신자·금액을 기본 값에서 가리고, 지캐시는 영지식 증명으로 거래 내용을 감춘다.
- 9) 여러 사용자가 각자의 비트코인을 하나의 공동 거래에 함께 입력하고 여러 주소로 보내, 외부 관찰자가 어느 입력이 어느 출력으로 이어졌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법.
- 10)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2계층(layer 2) 결제 네트워크. 결제 채널을 개설한 뒤 개별 결제는 채널 내부에서 처리하고, 채널을 종료할 때 최종 잔액을 블록체인에 반영함으로써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거래 정보의 공개 범위를 줄일 수 있다.
- 11) 어떤 정보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고도 그 정보가 참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암호 기술. 이를테면 비밀번호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도 그것을 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식이다. 거래의 유효성은 검증하면서 송신자·수신자·금액은 가릴 수 있다.

셋째, 프라이버시(privacy)다. 화폐가 거래 내역과 자산 보유 정보의 노출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를 가리킨다. 핵심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권력이 추적할 수 있는가’이다. 현금은 물리적 형태 덕분에 가장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만 휴대성과 원거리 송금에 제약이 있다. 비트코인은 가명성⁶⁾을 가지지만 모든 거래가 공개 원장⁷⁾에 기록되므로 분석을 통해 신원이 역추적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현금에 준하는 프라이버시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모네로(Monero)와 지캐시(Zcash)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⁸⁾, 비트코인의 코인조인(CoinJoin)⁹⁾과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¹⁰⁾,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¹¹⁾ 기반 거래가 개발되어 왔다. 이들이 감시 통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4장에서 다룬다.

넷째, 접근성(accessibility)이다. 은행 계좌, 신분증, 국경, 금융 인프라 없이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가리킨다. 핵심은 ‘권력이 허락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세계은행 글로벌 핀덱스(Global Findex)²⁾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21%가 여전히 공식 금융계좌를 갖지 못한다. 접근성은 다른 모든 기준의 전제 조건이다. 권력 저항성이 아무리 높아도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으면 저항의 화폐로 작동하지 못한다. 모바일 머니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 스테이블코인이 신흥국에서 채택된 이유 모두 접근성의 우위에서 비롯한다.

다섯째, 수용 공동체(acceptance Community)다. 해당 화폐를 함께 화폐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하는가를 가리킨다. 핵심은 ‘받는 사람이 있는가’이다. 화폐는 기술적 속성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없으면 가치 저장이나 교환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비트코인이 캐나다 자유 호송대 기부에서 작동한 까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자산이라도 그것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집단이 없는 사회에서는 저항의 수단으로 서지 못한다. 수용 공동체는 접근성과 함께 다른 모든 기준이 실제 작동하기 위한 전제다.

이 다섯 기준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권력 저항성, 가치 안정성, 프라이버시는 권력의 세 가지 통제 방식인 거래 통제, 가치 통제, 감시 통제에 각각 대응한다. 접근성과 수용 공동체는 그 대응이 실제로 발동하기 위한 토양이다. 어떤 화폐가 저항의 화폐가 되는가는 사용자가 마주한 위협의 축과 그 사용자가 갖춘 인프라·공동체 조건의 교집합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권력은 화폐를 통해 이 통제를 어떻게 행사하며, 개인은 어디까지 비켜설 수 있는가. 다음 장은 이를 개인과 권력 사이의 ‘거리’라는 틀로 짚는다.

제도적 거리와 화폐 권력

가까운 폭군과 먼 제국

1841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영국 본토의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민주적 자결권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명백한 결핍이라 할 수 있었지만, 홍콩의 재무장관(Financial Secretary) 존 카우퍼스웨이트(John James Cowperthwaite)가 펼친 경제 정책은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변모시켰다.³ 법치(Rule of Law), 경제적 자유, 재산권 보호라는 세 가지 요소가 투표권의 부재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한편 카우퍼스웨이트가 재무장관으로 재임한 시기를 전후해 중국 본토에서는 대약진운동¹²⁾과 문화대혁명¹³⁾이 이어졌다. 대약진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문화대혁명기에도 광범위한 폭력과 박해가 자행되었다. 자국 정부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던 본토의 주민과 투표권조차 없는 제국의 식민지 주민이었던 홍콩인 가운데, 누가 더 자유로웠고 누가 더 안전했는가. 본토에서는 가까운 권력이 경제 활동은 물론 생존까지 들어쥐었지만, 홍콩 식민정부는 낮은 세율과 자유무역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생산·투자 결정에 대한 직접 개입을 비교적 자제했다. 이는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안전이 통치 권력의 소재보다,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범위와 그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때로는 가까운 폭군보다 제도적으로 제약된 먼 제국이 나을 수 있다.

제도적 거리란 무엇인가

제도적 거리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개인에게 보장된 자율성 사이의 간격을 분석하는 틀이다. 개인과 권력 사이의 관계를 ‘거리’라는 말로 표현하는 까닭은, 그 관계의 본질이 통제와 자율의 정도에 있기 때문이다. 권력에 가까이 있을수록 개인의 경제 활동은 권력의 감시와 개입에 노출되고, 멀리 있을수록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제도적 거리란 바로 이 가까움과 멀음의 정도, 곧 한 개인이 권력체(정부, 기업, 금융기관)의 통제로부터 얼마만큼의 자율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가리킨다.

이 용어¹⁴⁾는 본래 국제경영학에서 두 국가의 제도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재는 척도로 쓰였다.⁴ 본 보고서는 이 개념을 국가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개인과 권력 사이의 관계로 옮겨 재정 의한다. 한 개인이 권력체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완전한 종속에서 완전한 주권에 이르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거리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권력이 개입하려는 힘과 개인이 자율을 지키려는 힘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정되는 변수다. 권력이 경제 활동에 깊이 개입할수록 거리는 종속 쪽으로 좁아지고, 개인이 그 개입을 비켜설 수단을 가질수록 주권 쪽으로 넓어진다. 저항의 화폐란 바

12) 1958~1962년 마오쩌둥이 추진한 급진적 공업화·집단지 운동. 비현실적 목표와 정책 실패로 대기근이 일어나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13) 1966~1976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정치·사회 운동. 계급투쟁을 명분으로 지식인과 반대파를 숙청해 사회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박해를 불러왔다.

14) 국제경영학에서 제도적 거리는 본국과 현지국의 제도 환경 차이를 뜻하며, 규제적·규범적·인지적 세 차원으로 나뉜다. 다국적기업이 한 나라의 경영 관행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때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여기서 거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도적 간격을 가리킨다. 본 보고서는 이 국가 간 척도가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거리’라는 발상만을 빌려, 측정의 단위를 개인과 권력의 관계로 옮긴다.

로 이 거리를 넓히려는 개인의 선택이 화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어떤 화폐가 거리를 얼마나 넓혀 주는가는 그 화폐가 권력의 어떤 개입에 맞서는가에 달려 있다.

스펙트럼의 한쪽 극단은 완전한 종속이다. 개인의 자산과 정보가 권력체에 의해 전면 통제되며,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주의 국가의 감시 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쪽 극단은 완전한 주권이다. 어떤 권력체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 자율이지만, 이는 동시에 어떤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실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이상(理想)에 가깝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 양 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통제와 자율의 균형을 협상하며 살아간다. [표 1]은 이 스펙트럼의 두 극단과 그 사이의 중간 영역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01 제도적 거리 스펙트럼의 구조

	종속 극단	중간 영역	주권 극단
상태	완전한 종속	전략적 상호보완	완전한 주권
통제권	권력자	양자 분배	개인
데이터	자산과 정보의 전면 통제	적당한 노출과 편리성 확보	프라이버시 확보

역사적으로 제도적 거리는 기술과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되어 왔다. 중세 봉건제에서 농노와 영주의 거리는 거의 0에 가까웠다. 토지에 묶인 농노는 이동의 자유도, 경제적 자율성도 갖지 못했다.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이 거리를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다.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개인에게 권력체로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20세기에는 이 거리가 극적으로 요동쳤다.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는 거리를 다시 종속에 가깝게 압축했고,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거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잠시 거리 확장의 시대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거리를 다시 축소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가와 기업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켰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ID,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같은 도구가 모두 제도적 거리를 종속을 향해 압축하고 있다.

권력이 이 거리를 좁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화폐다. 그렇다면 권력은 화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그 거리를 좁히는가. 이것이 다음 절의 주제다.

화폐 권력의 세 가지 통제 방식

권력이 화폐를 통제하는 길은 앞서 본 세 당사자에 있다. 돈을 맡아 두는 관리자, 거래를 매개하는 중개자, 돈을 찍는 발행자를 손에 쥐거나 압박할 수 있다면, 권력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세 방향에서 옥죄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거래의 가능 범위, 화폐의 구매력, 경제 활동의 가시성을 좌우하며, 각각 거래 통제·가치 통제·감시 통제로 나타난다.

첫째, 거래 통제(transaction control)다. 누구와 얼마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계좌 동결, 자본 이동 제한, 송금 차단, 결제 네트워크 배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15) 중앙은행이 국채 등 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정책, 자산 가격을 떠받치지만 본원통화가 늘어 화폐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

다. 비트코인을 자기수탁할 경우, 정부가 은행이나 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직접 동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 통제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높다.

둘째, 가치 통제(value control)다.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권력이 일방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¹⁵⁾, 화폐개혁, 평가절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국 통화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평가절하에 노출된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상대적 안정성을 빌리고 전통적인 은행 계좌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 이 축에서 실용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감시 통제(surveillance control)다. 개인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노출되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의 문제다. 국가가 거래 데이터를 사회적 통제에 활용하거나, 빅테크가 소비 패턴을 예측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이 그 대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데이터를 넘기고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 모두 이 축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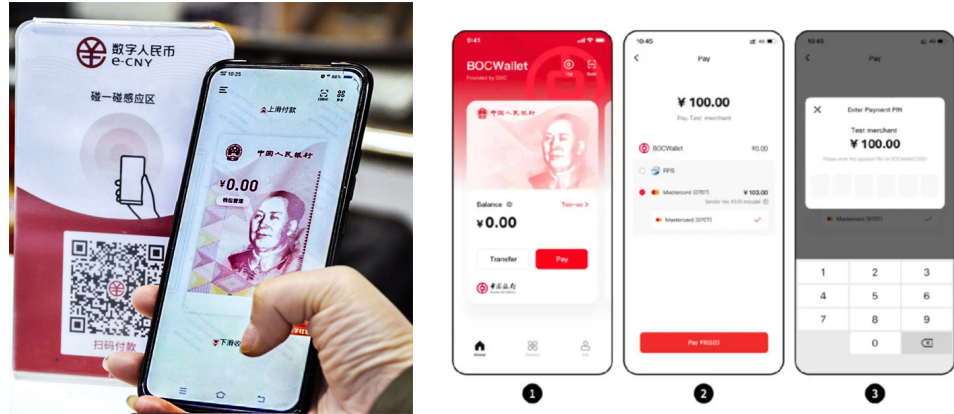
이 세 축은 독립적이지 않다. 폭정 국가의 개인은 세 축 모두에서 거리가 강제로 종속에 가깝게 좁혀져 있고,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감시 통제 축은 편의의 대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좁혀지며, 위기 상황에서는 거래 통제 축마저 급격히 좁혀질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축 모두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일상에서 쓰는 은행 예금이 민간 은행이 진 빚이고 비트코인이 민간이 만든 자산이라면,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현금을 디지털로 옮긴 것이다. 종이 현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화폐 자체에 규칙을 새겨 넣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발행자가 코드로 정할 수 있는, 이른바 ‘프로그래머블 화폐’다.

사용처를 제한하면 거래 통제가, 유효기간을 걸어 저축을 막으면 가치 통제가, 모든 거래가 중앙에 기록되면 감시 통제가 작동한다. 다만 이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쓰이는가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CBDC는 은행 사이의 결제에 쓰는 도매형과 개인이 직접 쓰는 소매형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소매형이다.

통제에 가장 가까이 간 사례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e-CNY)⁵⁾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2019년 말 내부 시범을 시작해 2020년 4월부터 선전과 쑤저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공개 시범 운영해 온 e-CNY는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고 인터넷이 끊긴 곳에서도 단말기를 맞대어 거래할 수 있다. 소액 결제는 익명에 가깝게 처리되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통제된 익명성(可控匿名)’을 표방하여, 평상시에는 익명처럼 보이지만 추적의 스위치는 발행자가 쥐고 있는 구조다.

FIGURE 01 중국의 디지털 위안(e-CNY) 결제 화면(좌)과 지갑 앱 결제 과정(우).



출처: 매일경제(좌), Registration China(우).

- 16) 시중은행이 고객 예금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위에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의 도매형 CBDC 위에서 개인이 실제로 쓰는 수단으로 설계됐다.

바하마의 샌드 달러(Sand Dollar)⁶⁾는 2020년 10월 전국에 도입된 소매형 CBDC로, 섬으로 흩어진 군도 전역의 금융 포용과 디지털 결제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준비 중인 디지털 유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를 앞세워,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현금에 준하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도매형) CBDC만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그 위에서 예금토큰¹⁶⁾을 발행해 개인이 쓰도록 한 은행 중개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개인의 거래를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가 아니다. 나아가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거래와 무관한 외부 기관에 기록되지 않는 이중 보호체계를 두었다. 이처럼 CBDC는 국가별 정책 목표와 제도적 선택에 따라 감시 가능성, 금융 포용성,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서로 다르게 설계된다.

따라서 CBDC를 그 자체로 통제의 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짚어 둘 점은,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블 화폐인 이상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에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종이 현금의 프라이버시가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나왔다면, CBDC의 프라이버시는 추적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약속에 기댄다. 이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적 약속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어떤 형태의 CBDC든 함께 따라오는 과제다.

현실의 저항의 화폐

거래 통제에 대한 저항

17) 2020년 나이지리아에서 경찰 특수강도반(SARS)의 고문·갈취·불법 살해에 항의해 일어난 전국적 시위. 소셜미디어 해시태그로 시작해 거리 시위로 번졌고, 정부가 SARS 해체를 발표했으나 강경 진압이 이어졌다.

2020년 10월, 나이지리아에서는 경찰 특수강도반(SARS)의 폭력에 항의하는 #EndSARS¹⁷⁾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들이 모금에 쓰던 핀테크 플랫폼 플러터웨이브(Flutterwave)의 결제 링크가 막히고 은행 계좌마저 동결되었다. 거래 통제를 통해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던 의료·법률·식량 지원을 끊음으로써 총을 쏘지 않고도 저항을 질식시키는 방법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시위대는 비트코인으로 우회했다. 계좌가 막힌 직후 비트코인 기부 주소를 열었고, 시위가 잦아들 무렵 모인 약 38만 7천 달러 가운데 비트코인이 40%가량을 차지했다.⁷⁾ 발행사도 중개 은행도 없는 비트코인 기부는 정부가 막을 수 없었다. 이 일은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censorship resistance)이 이론 속 미덕이 아니라 현실의 생존 수단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권력이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열 불가능한 가치 전송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FIGURE 02 2020년 나이지리아 #EndSARS 시위 현장(좌)과 잭 도시(Jack Dorsey)의 비트코인 기부 호소 트윗(우).



출처: Quartz Africa.



18) 2022년 캐나다에서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 트럭 운전자들이 오타와 도심을 점거한 시위. 정부가 긴급조치법을 발동해 후원 계좌를 동결했다.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이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가 2022년 캐나다에서 발생했다.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자유 호송대(Freedom Convoy)¹⁸⁾’ 시위가 오타와 도심을 점거하자, 모금 창구가 먼저 막혔다. 2월 4일 고펜드미(GoFundMe)는 약관 위반을 이유로 모금 캠페인을 중단했고, 2월 10일 온타리오 상급법원은 주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브샌드고(GiveSendGo)로 모인 기부금의 처분을 금지했다. 나흘 뒤인 2월 14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1988년 제정된 긴급조치법(Emergencies Act)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다. 이에 따라 시위와 관련된 금융계좌 약 210개가 동결되었으며, 동결된 자산은 약 780만 캐나다 달러에 달했다.⁸⁾

반면 비트코인을 통한 모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CBC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 관련 지갑으로 약 20.7 BTC(약 106만 캐나다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당국이 동결에 성공한 것은 그 중

5.96 BTC에 불과했다.⁹

당국이 동결에 동원한 수단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이었다. 긴급조치법에 근거한 긴급경제조치명령(Emergency Economic Measures Order)은 가상화폐를 동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기부금을 모으는 가상화폐 플랫폼에 준수 의무를 부과했으며, 연방경찰(RCMP)은 시위 관련 34개 암호화폐 주소 명단을 국내 거래소들에 보내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¹⁰ 오타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온타리오 상급법원이 내린 마레바 금지명령(Mareva injunction)은 암호화폐를 동결 대상으로 명시했고, 일부 피고는 지갑의 통제권을 법원이 승인한 에스스로 대리인에게 넘겼다.

반면 자기수탁 지갑 앱 년척(Nunchuk)은 사용자의 키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동결할 수도 그 존재와 규모를 알 수도 없다고 법원에 회신했다.¹¹ 당국은 거래소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지갑 소유자에게 자산 이전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비밀키를 확보하지 않는 한 자기수탁된 비트코인의 이전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마레바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직전 자금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면서 모금액 대부분은 실제 동결을 피했다.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와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서구 민주주의, 법치 국가, 안정된 경제)에서도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앞에서도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이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2019년 홍콩 시위에서도 같은 회피가 나타났다. 시위대는 옥토퍼스 카드에 남는 이동 기록이 시위 참여의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해 지하철표를 현금으로 샀고, 당장 현금화할 필요가 없는 해외 기부는 암호화폐로 받았다. 거래 통제를 앞에 둔 개인이 현금과 암호화폐를 위협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준 셈이다.¹²

가치 통제에 대한 저항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달러는 저항의 화폐로 가장 널리 쓰여 왔다.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레바논처럼 자국 화폐가 신뢰를 잃은 곳에서 개인들이 손에 쥐고자 했던 것은 달러였다. 국가 단위의 거시적 관점이 아닌 개인 단위의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자국 화폐가 붕괴할 때 달러를 움켜쥐는 행위는 분명한 저항이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란 한 국가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채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개인들이 자국 화폐를 피해 달러를 쥐는 선택이 제도 밖에서 이어져 왔고 파나마와 에콰도르는 공식적으로 달러를 법정화폐로 삼았다. 짐바브웨에서는 그 둘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2008년 하이퍼인플레이션¹⁹ 속에서 사람들이 짐바브웨 달러를 거래에서 밀어내고 외화를 쓰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듬해 2월 다중통화제를 공식화해 그 선택을 뒤따라 인정했다.¹³

물론 달러라이제이션이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지는 않는다. 달러의 통화정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²⁰가 결정하므로, 자국 정부의 통화정책에서 벗어나는 대신 미국의 통화정책에 노출된다. 가까운 폭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먼 제국의 그늘로 들어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자국 화폐가 무너지는 위협 앞에 선 개인에게 이러한 맛바꿈은 유효한 저항이 될 수 있다. 당장 구매력을 앗아 가는 가까운 권력보다 일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먼 권력을 택함으로써 당면한 통화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 물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일반적으로 월간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정하며, 달러 지폐 발행을 관장한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저항의 화폐를 선택하는 일이 절대적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협과 맥락에 따라 권력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위협이 미국 정부나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는 달러가 아닌 다른 수단이 권력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치 통제에 맞서는 수단은 디지털 시대의 발명품이 아니다. 자국 화폐가 구매력을 잃을 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금을 대안적인 가치 저장·교환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오래된 대응 방식이 21세기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년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베네수엘라에서는 2018년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약 13만% 상승했다.¹⁴ 이러한 통화 가치의 붕괴 속에서 남부 볼리바르주(Bolívar State)의 광산 마을 투메레모(Tumeremo) 주민들은 금 조각(gold flakes)을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했다. 반 그램이면 호텔 1박, 4분의 1그램이면 두 사람 점심값이었고, 상점과 식당에는 가격이 그램 단위로 표시되었다.

블룸버그(Bloomberg)의 현지 르포에 따르면, 주민들은 금 조각을 떼어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볼리바르 지폐로 금 조각을 감싸 거래했다.¹⁵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휴지가 되었을 때, 개인들은 수천 년 전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금이라는 보편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것은 저항의 화폐가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반응임을 상기시킨다.

FIGURE 03 베네수엘라 투메레모에서 볼리바르 지폐에 감싼 금 조각을 저울로 계량하고 있다.



출처: Bloomberg.

베네수엘라가 금이라는 오래된 수단으로 돌아갔다면, 아르헨티나는 스테이블코인을 저항의 화폐로 선택했다. 2023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11.4%에 이르렀고¹⁶, 페소는 2014년 말 달러당 8.5페소에서 2024년 말 1,031페소로 10년 사이 가치의 99% 이상을 잃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개인의 달러 구매를 월 200달러로 묶었지만, 개인들은 스마트폰으로 USDT와 USDC를 매입하며 이 규제를 우회했다. 이 환전 규제는 2025년 4월에야 풀렸다.¹⁷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²¹⁾의 2025년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를 만성적 인플레이션, 통화 변동성, 자본 통제가 결합해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구조적으로 견인하는 지역으로 분류한다. 같은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액은 939억 달러로 브라질에 이어 라

21) 블록체인 거래를 추적·분석하는 미국 데이터 기업. 각국 정부와 거래소에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틴아메리카 2위에 올랐다.¹⁸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들이 인플레이션과 자본 통제에 대응해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면서 아래로부터 진행된 디지털 달러 라이제이션이라 할 수 있다.

가치 통제가 늘 점진적 인플레이션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2016년 화폐개혁(demonetization)은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화폐 가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모디 정부가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의 통용을 폐지하자, 인도 유통 화폐 가치의 86.9%(약 15.4조 루피)에 해당하는 현금이 순식간에 무효화되었다.¹⁹ 공식적으로는 지하경제 근절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수억 명의 비공식 경제 참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새 지폐나 다른 자산으로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 이 사례는 현금이 감시나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통제에는 저항성을 지닐 수 있지만, 발행 주체가 가하는 가치 통제에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저항의 효과가 자산 자체의 속성뿐 아니라 대체 수단과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감시 통제에 대한 저항

22) 기업이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원료로 삼아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상품을 만들고 이를 거래하는 축적 방식. 노동력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가 수익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주의와 구별된다.

쇼샤나 주보프(Zuboff, 2019)가 이론화한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²²⁾는 제도적 거리의 소멸이 정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²⁰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빅테크)은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예측 상품(prediction products)으로 변환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한다.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착취의 대상은 노동력이었지만, 감시 자본주의에서 착취의 대상은 행동 데이터다. 개인은 무료 서비스가 제공하는 접근성과 편의의 대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도적 거리를 축소한다. 이것은 폭군에 의한 강제적 종속이 아니라 편의에 포획된 무자각적 종속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기가 더 어렵다.

구글은 검색 기록과 위치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하고, 메타(구 페이스북)는 소셜 그래프를 통해 이용자의 인간관계를 파악한다. 아마존은 구매 패턴을 분석해 소비자의 욕구를 예측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단순한 광고 타겟팅을 넘어 ‘행동 수정(behavioral modification)’이라 불리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는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넛지(nudge)²³⁾, 보상, 알림을 통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행동을 강제하지 않고 선택이 이뤄지는 맥락을 살짝 바꿔 특정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

금융 영역에서 이 감시는 더욱 직접적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핀테크 앱은 사용자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금융 습관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개인이 편의의 대가로 넘긴 금융 데이터는 신용 점수 산정, 보험료 책정, 대출 심사에 활용된다. 개인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지만, 그 데이터의 소유권과 해석권은 기업이 독점한다. 이것이 주보프가 말하는 ‘행동 잉여(behavioral surplus)’의 핵심으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성한 데이터 중,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업의 수익 원천으로 전용되는 것이다.

TABLE 02 독재 정권의 개인과 플랫폼 경제 소비자의 구조적 유사성

구분	독재 정권의 개인	플랫폼 경제의 소비자
권력자	전체주의 독재자	플랫폼 기업
수단	계좌 동결·검열	알고리즘·디지털 통제
거리	강제 축소	무자각적 축소 (편의와 교환)
저항 도구	BTC, 스테이블코인 (검열·동결 저항)	프라이버시 기술, 디파이 (데이터 주권 확보)
결과	제도적 거리 축소 (강제적)	제도적 거리 축소 (자발적·무자각적)

저항의 화폐는 독재 정권의 개인에게도 감시 자본주의의 소비자에게도 필요하되, 그 형태와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다. 다만 감시 통제는 거래 통제나 가치 통제와 달리 평상시에는 위협으로 체감되지 않는다. 계좌가 동결되거나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사건과 달리, 거래 데이터의 축적은 조용히 진행되며 그 비용은 미래의 일로 미뤄진다. 그러나 데이터가 실제 제재의 근거로 전환되는 순간, 감시 통제는 다른 두 축 못지않은 구속이 될 수 있다. 이 축에 대응하는 저항의 화폐는 거래의 익명성과 비연결성(unlinkability)²⁴⁾을 회복하는 기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장 오래된 우회 수단은 현금이다. 물리적 화폐는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디지털 결제가 일반화된 사회일수록 현금은 오히려 강한 프라이버시 수단이 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현금의 이 속성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프라이버시 코인이다. 모네로는 링 서명(ring signature)과 은닉 주소(stealth address)로 송신자와 수신자, 금액을 기본값에서부터 가린다. 지캐시는 영지식 증명으로 거래의 유효성은 검증하면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차폐 거래(shielded transaction)를 제공한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들은 프라이버시를 사후 선택이 아니라 기본 설계로 삼는다.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도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코인조인은 여러 사용자의 거래를 하나로 합쳐 어떤 입력이 어떤 출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끊는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본래 확장성을 위한 기술이지만, 소액 거래를 블록체인 밖의 결제 채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거래가 공개 원장에 남지 않는 효과도 함께 낳는다. 다만 결제 경로를 중계하는 노드가 거래를 관찰할 수 있어 그 프라이버시는 제한적이다.

이 기술들이 실제로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권력 자신의 반응에서 드러난다.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더리움 기반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대상에 올렸고, 2024년에는 비트코인 프라이버시 지갑인 사무라이 월렛(Samurai Wallet)의 개발자들이 자금세탁 및 무면허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²¹⁾ 같은 해 또 다른 코인조인 서비스인 와사비 월렛(Wasabi Wallet)도 코디네이터 운영을 중단했다.²²⁾ 권력이 화폐 자체가 아니라 화폐의 익명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감시 통제가 권력에게 그만큼 중요한 통제 축이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그 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저항의 수단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2024년 11월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의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재 근거 법률이 정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FAC이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고, 재무부는 2025년 3월 이 서비스를 제재 목록에서 해제했다.²³⁾ 다만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풀린 뒤에도 개발자에 대한 형사 절차는 이어졌다.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창업자 두 사람은 2025년 7월 무면허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를 인정해 같은 해 11월 각각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토네이도 캐시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

24) 여러 거래가 같은 사람의 것임을 외부에서 이어 붙여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성질.

(Roman Storm)에게도 2025년 8월 같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서는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했으며, 검찰은 평결이 나오지 않은 두 혐의에 대해 2026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권력과 프라이버시 기술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²⁴

물론 국가와 기업이 거래를 들여다보는 힘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차단하고, 금융 사기와 범죄를 예방하며, 조세 정의를 떠받치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면 바로 그 익명성이 범죄의 은신처가 되며, 권력이 프라이버시 기술을 표적으로 삼는 명분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감시 통제 역시 옳고 그름으로 가를 문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얼마나 거리를 내주고 자율을 위해 얼마나 거리를 지킬 것인가 사이의 줄다리기로 보아야 한다. 너무 투명하면 권력에 종속되고, 너무 불투명하면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보호를 잃는다. 저항의 화폐가 회복하려는 것도 감시의 제거가 아니라, 개인이 그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다.

다만 이 축에서 개인이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다른 두 축보다 좁다. 독재 정권의 거래 통제는 계좌 동결이나 송금 차단처럼 강제의 형태로 닥치므로 저항할 대상도 저항할 시점도 분명하다. 반면 기업 권력은 무료 검색과 즉시 결제, 맞춤 추천이라는 혜택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은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스스로 데이터를 건네며, 그 대가는 계좌가 막히는 사건처럼 특정한 시점에 체감되지 않는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건네주는 구조에서는 무엇에 저항할 것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렵다.

플랫폼 경제의 소비자가 쥔 수 있는 저항 도구로 [표 2]가 프라이버시 기술과 함께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²⁵⁾를 꼽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디파이는 예치와 대출, 교환을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개자 없이 공개된 코드로 수행하므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신원과 거래 이력을 특정 기업에 넘겨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여지를 준다. 그러나 그 여지는 제한적이다. 법정화폐를 드나드는 길목에서는 다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중개자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편의를 포기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디파이는 선택지로 떠오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시 통제 축에서는 개인의 화폐 선택만으로 제도적 거리를 지키기 어렵다. 기업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해 온 힘은 또 다른 권력체, 곧 국가의 규제였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처럼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그 예다. 앞서 개인은 가까운 폭군을 피해 먼 제국을 택했지만, 편의를 앞세워 일상 깊숙이 들어온 기업 권력 앞에서는 국가의 규제에 기대게 된다. 제도적 거리는 권력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력체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도 위에서 확보되기도 한다. 저항의 화폐가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거래·가치·감시의 세 축에서 관건이 된 것은 각각 권력 저항성과 가치 안정성, 프라이버시였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금, 달러와 스테이블코인, 프라이버시 기술은 같은 축의 위협 앞에서 저마다 다르게 선택되었다. 무엇이 저항의 화폐가 되는가는 위협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위협을 마주한 개인이 어떤 조건 위에서 있느냐에 따라 달랐다. 그렇다면 그 선택을 가르는 조건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시간 선호와 거리의 최적화, 사회의 인프라와 공동체, 그리고 권력의 총위를 통해 저항의 화폐가 선택되는 조건을 살핀다.

25)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의 위 공개된 코드로 예치·대출·교환 같은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 이용자가 자산을 직접 보관한 채 거래하므로 중개기관에 신원과 거래 이력을 넘기지 않아도 되지만, 코드의 결함이나 해킹에 따른 손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동적 균형 프레임워크

시간 선호와 거리의 최적화

시간 선호란, 지금의 만족과 미래의 만족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를 가리킨다. 현재의 소비보다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쌓는 개인은 시간 선호가 낮고, 미래보다 당장의 소비 또는 생존에 무게를 두는 개인은 시간 선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낮은 시간 선호를 적극적으로 미덕화하며, ‘지금 쓰지 말고 평생 보유하라’는 뜻의 ‘HODL’이 그 문화의 상징적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 앞의 사례들 대부분이 이미 그 조건이 무너진 환경에서 나왔다. 물가가 한 해 211%까지 오른 2023년 아르헨티나에서 매달 받은 페소가 다음 달이면 구매력을 잃던 개인, 소비자 물가가 2018년 한 해 13만%를 넘기며 볼리바르가 거의 무가치해진 베네수엘라 투메레모의 광산 마을 주민이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권력체에게 종속된 금융 소외 계층에게는 10년 뒤 몇 배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시간 선호 역시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제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강제된 시간 선호, 곧 자국 법정화폐로는 저축이나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금의 가치 안정성을 빌려 시간 선호를 낮추려는 생존 전략은, 결국 저항의 화폐를 통해 제도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의 한 측면이다. 그리고 이 생존 전략은 가치 안정성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권력 저항성·프라이버시·접근성·수용 공동체까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강제된 시간 선호를 조절하고자 하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체와의 거리를 조절하여 최적화하려 한다. 너무 가까우면 자유를 잃고, 너무 멀면 보호를 잃는다. 이 역설적 긴장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최적점을 탐색한다.

최적점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동적 변수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최적 거리가 변한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편의를 위해 기꺼이 거리를 축소하지만(정부, 은행, 카드,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위기 상황(고인플레이션, 계좌 동결, 자본 통제, 정치적 탄압)이 발생하면 즉시 거리를 조절하려 한다. 저항의 화폐는 바로 이 ‘거리 조절’의 도구다.

국가는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금이라는 추출을 행하는 ‘정주형 약탈자(stationary bandit)²⁶⁾²⁵⁾이며, 개인은 보호의 이익이 추출의 비용을 상회하는 한 이 관계를 수용한다(Olson, 1993). 그러나 추출이 보호를 초과하는 순간, 곧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예금 동결, 자본 통제가 닥치면 개인에게 남는 선택지는 ‘이탈(exit)²⁶⁾이다. 불만족한 구성원은 조직에 남아 항의(voice)하거나 조직을 떠나는(exit) 두 길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암호화폐는 물리적 국경을 넘지 않고도 은행의 허가 없이도 국가 화폐 시스템에서 이탈할 수 있게

26) 올슨이 국가를 한곳에 눌러앉은 약탈자에 빚든 개념. 떠돌며 빼앗는 ‘유랑형 약탈자(roving bandit)’와 달리, 한 영역을 오래 지배하는 정주형 약탈자는 약탈을 세금으로 제도화하고 치안·재산권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

한 수단이다. 금이나 외화를 통한 이탈이 보관·운송이나 자본 통제라는 비용을 치렀던 것과 달리, 이 이탈의 문턱은 크게 낮아졌다.

그렇다면 왜 평상시에는 이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가?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이 이를 잘 설명한다²⁷. 인간은 같은 크기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편의성이 주는 이익은 크게 체감되는 반면, 프라이버시 양도라는 손실은 추상적이고 먼 미래의 일로 과소평가된다. 그러나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이 위협받는 순간, 손실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 전망 이론의 손실 회피(loss aversion)가 작동하면서, 최적 거리는 급격히 확장 방향으로 이동한다. 저항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위기 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비합리적 공황이 아니라, 인간 인지 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다.

강제된 시간 선호의 조절과 권력체와의 거리 최적화는 동일한 본능의 두 표현이며, 이 본능은 평상시에는 편의를 위해 거리를 좁히고 위기 시에는 손실 회피를 위해 거리를 넓히는 형태로 작동한다. 다만 이 본능적인 선택이 실제로 저항의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 곧 인프라와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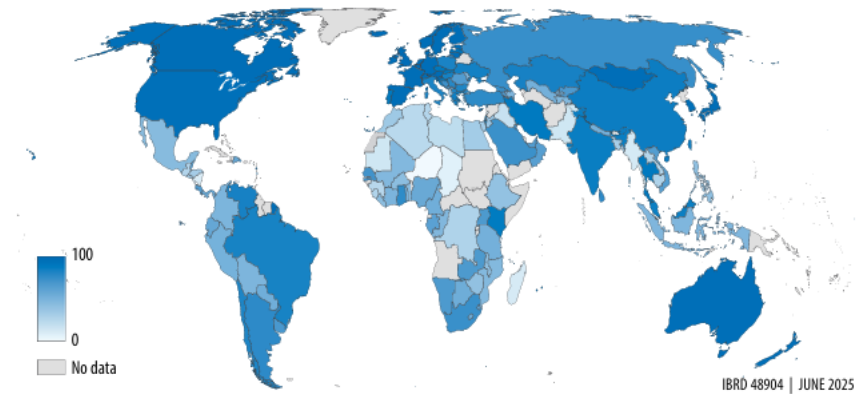
■ 인프라와 공동체

선택이 실제 거래와 저장으로 이어지려면 그것을 떠받치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다섯 기준 가운데 접근성과 수용 공동체가 바로 그 조건이다.

접근성은 저항의 화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기술적 토대의 문제다. 앞서 살펴본 계좌 미보유 성인 21%가 공식 금융에서 배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장벽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촌에서는 은행 지점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신분증·주소 증명·최소 예치금 등의 요건도 빈곤층에게 높은 문턱이 된다. 다른 하나는 권력에 의한 제도적 배제다. 독재 정권이 정치적 반대파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법과 관행이 여성의 독립적인 금융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FIGURE 04 전 세계 성인의 계좌 보유율(2024).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보유율이 낮게 나타난다.

Adults with an account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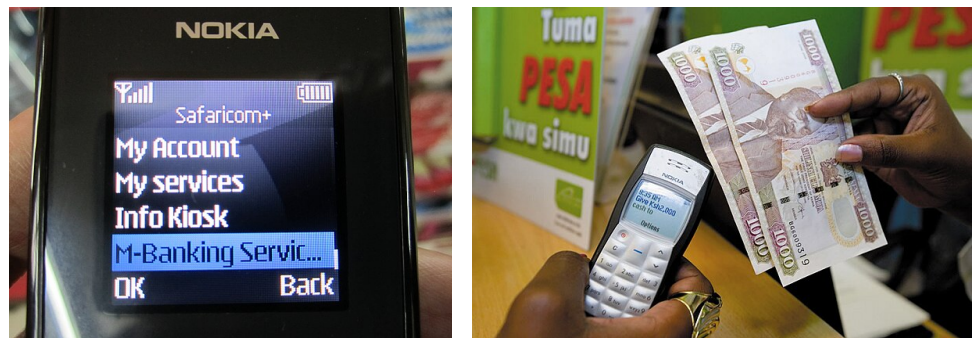


Source: Global Findex Database 2025.

출처: World Bank, Global Findex Database 2025.

케냐의 엠페사(M-Pesa)는 이 배제를 넘어선 대표적 사례다. 2007년 통신사 사파리콤이 내놓은 이 모바일 머니는 은행 계좌도,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일반 피쳐폰의 문자메시지로 송금하고, 동네 상점과 가판대에 있는 대리점에서 현금을 넣고 뺀다. 은행 지점이 없던 농촌에서도 휴대폰 한 대와 가까운 대리점만 있으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접근성의 확대는 빈곤 완화로도 이어져, 엠페사는 케냐의 약 19만 4천 가구, 전체의 2%가량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그 효과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²⁸

FIGURE 05 케냐의 M-Pesa 서비스 화면(좌)과 모바일 머니 거래(우).



출처: Wikimedia Commons.

다만 모바일 머니의 권력 저항성은 거의 없다. 통신사가 모든 거래 기록을 쥐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계좌를 동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자체가 중앙 서버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엠페사의 성공은, 사람들이 정말로 원한 것이 이념적으로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접근성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접근성은 어떤 화폐가 저항의 화폐로 선택되는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권력 저항성이 가장 높은 화폐라도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으면 저항의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위협 앞에서도 스마트폰과 핀테크가 보급된 사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토대가 얇은 곳에서는 금이나 현금이 선택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수용 공동체는 그 화폐를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의 존재다. 화폐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된다. 베네수엘라 투메레모에서 금 조각이 화폐로 통한 것은 마을의 상점과 식당이 그것을 값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달러라이제이션 국가에서 달러가 저항의 화폐가 된 것도 개인과 상인 다수가 이미 달러를 신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엠펜사가 케냐에서 작동한 바탕에는 사용자와 대리점, 상점이 촘촘히 연결된 수용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용 공동체도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한국의 사례가 역설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자금의 피난처로 선택되기는커녕 가격이 30% 넘게 급락했다. 업비트에서 1억 3,251만 원이던 가격은 약 20분 만에 8,82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채택되기 전인 자정 무렵 1억 3,000만 원대를 회복했다.²⁹ 정치적 위기 속에서 국내 시장의 비트코인이 저항의 화폐로 기능하기보다 위험자산처럼 거래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암호화폐를 위기의 피난처로 공동 인식하는 수용 공동체가 없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거래가 놓인 인프라의 성격이다. 비트코인의 권력 저항성은 개인이 직접 키를 쥐는 자기수탁에서 주로 나오는데,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은 업비트·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 계정에서 이루어진다. 거래소에 맡겨 둔 비트코인은 그 거래소가 정부 명령에 따라 동결하거나 출금을 막을 수 있어, 계좌 속 원화나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아래 있다. 자기수탁이라는 토대가 얇은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저항의 화폐가 아니라 사실상 또 하나의 투자 또는 투기 상품으로 인식된다. 결국 같은 자산이라도 그것을 피난처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와 개인이 직접 보관할 인프라가 갖춰진 사회에서만 저항의 화폐가 되며, 그 성격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자산을 둘러싼 공동체와 인프라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프라와 공동체가 갖춰졌다 해도, 저항의 화폐가 모든 권력을 똑같이 우회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하나의 층위로 존재하지 않으며, 저항의 화폐가 어느 층위의 통제까지 실제로 비껴설 수 있는지는 다음 절의 문제다.

■ 권력의 층위와 통제 가능성

개인이 마주하는 권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위에 걸쳐 있다. 국가는 계좌 동결과 발권, 거래 감시로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 결제와 데이터를 쥔 플랫폼 기업도 계정을 막고 소비 기록을 분석하며 같은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거래·가치·감시라는 세 축은 권력의 층위를 달리해 반복되는 셈이다. 저항의 화폐는 이 층위들에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어떤 화폐는 국가의 거래 통제는 비껴서면서도 플랫폼의 감시는 그대로 받고, 어떤 화폐는 감시는 차단하되 가치 안정성을 내어 줄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이 그 비대칭을 잘 보여준다. 자국 화폐가 무너진 곳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자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우회해 달러 가치에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의 관리 권한과 미국 중심의 규제·제재 체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발행사는 특정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토큰의 이전을 차단할 수 있으며,³⁰ 달러에 연동된 가치 역시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한 층위의 권력에는 강하면서도 다른 층위의 권력에는 취약한 것이다.

통제 가능성 역시 양면적인 요소이다. 권력이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본 올슨의 보호-추출 균형에서 추출의 반대편에 보호가 있었듯, 권력과 거리를 넓혀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권력이 제공하던 보호장치도 함께 사라진다. 은행이 거래를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은 도난당한 자산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뜻이고, 결제 네트워크가 거래를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은 사기 거래를 무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양면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돈이 은행 계좌에 머무는 동안에는 지급 정지와 환수라는 제도적 보호가 작동하지만, 그 돈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어 자기수탁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되돌릴 방법이 사라진다. 범죄 조직이 비가역성과 검열 저항성 때문에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과, 개인이 같은 속성으로 권력의 동결을 피하려는 것은 같은 성질에 기댄다. 같은 속성이 한쪽에서는 시위대의 기부금을 지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 피해의 회수를 막는다. 다시 말해, 비가역성과 검열 저항성은 개인을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 개입을 통한 구제도 어렵게 한다.

이 비용이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평상시에 권력과 거리를 좁힌 채 살아간다. 앞서 본 카너먼·트버스키의 손실 회피가 위기 시에 거리를 넓히는 쪽으로 작동한다면, 평상시에는 보호의 상실이라는 비용이 거리를 좁히는 쪽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저항의 화폐의 선택은 한 권력에서 벗어나 무방비 상태가 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층위의 통제를 감수하고 어느 층위의 통제에서 벗어날지를 저울질하는 일이다.

결국 어느 화폐도 모든 층위의 통제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저항의 화폐의 선택은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문제가 된다.

■ 하나의 정답은 없다

앞의 사례들은 같은 자산이 놓인 자리에 따라 다르게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계좌가 막힌 시위대의 손에서 저항의 화폐였지만 법정화폐가 멀쩡하게 기능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금과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가치 통제 앞에서도 인프라에 따라 갈렸다. 저항의 화폐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축과 개인이 처한 조건이 맞물려 그때그때 결정되는 최적해의 집합이다.

나아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 같은 화폐라도 상황이 바뀌면 그 성격이 통째로 뒤집힌다. 검열에 맞선 나이지리아 시위대의 손에서 저항의 화폐였던 비트코인은, 그것을 피난처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없던 한국의 비상계엄 밤에는 저항의 화폐이기는커녕 급락하는 투기 상품에 가깝게 반응했다. 어떤 자산도 본래부터 저항의 화폐인 것이 아니며, 한번 저항의 화폐였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남지도 않는다. 화폐의 성격은 자산 안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위협과 맥락과 공동체가 매번 다시 부여한다. 그래서 저항의 화폐에 고정된 정답은 없으며, 최적의 선택은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잡히는 동적 균형으로만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는 어느 저항의 화폐가 더 낫다고 가릴 수 없다. 비트코인은 검열과 압수에 맞서는 이상적 주권에 가장 가깝고, 스테이블코인은 무너진 자국 화폐 앞에서 당장 내일의 생활을 지킨다. 하나는 길게 보는 주권을, 다른 하나는 눈앞의 생존을 말한다. 둘은 같은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다. 금과 외화, 현금, 모바일 머니, 프라이버시 기술도 저마다의 상황에서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나의 판단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세운 다섯 기준(2장)과 세 통제 축(3장), 그리고 이 장에서 짚은 선택 조건들을 한자리에 모으면, 어떤 저항의 화폐가 최적인지는 다음 다섯 가지 물음을 차례로 물을 때 좁혀진다. 첫째, 지금 마주한 위협이 거래·가치·감시 가운데 어느 축인가(위험 진단). 둘째, 지켜야 할 시간 지평이 먼 미래인가 당장의 생존인가(시간 조건). 셋째, 그 수단을 실제로 쓸 인프라와 접근성이 갖춰져 있는가(사용 조건). 넷째, 그 화폐를 값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는가(공동체 조건). 다섯째, 그 선택으로 벗어나는 통제와 맞바꾸어 잃게 되는 보호는 무엇인가(통제 위험). 이 다섯 답이 겹치는 자리에서 도구가 정해지며, 조건 하나만 달라져도 답은 옮겨 간다. [표 3]은 이 절차를 앞서 본 사례들에 적용한 것이다.

TABLE 03 동적 균형 프레임워크의 판단 절차와 사례별 적용

상황	위험 진단	시간 조건	사용 조건(접근성·인프라)	공동체 조건	통제 위험	선택된 도구
나이지리아·캐나다 시위 (계좌·모금 차단)	거래 통제(검열)	즉시 이체	자기수탁·P2P 가능	국경 밖 비트코인 네트워크	국가의 동결은 피하되 변동성과 비가역성은 감수	비트코인
한국 비상계엄 (2024.12)	거래 통제(잠재적 거래·가치 위협)	위기의 순간	중앙화 거래소 중심(자기수탁 없음)	피난처로 보는 공동체 부재	거래소가 동결 가능해 저항이 성립하지 않음	저항의 화폐 부재(투기자산화)
아르헨티나 (2023년 고인플레이션)	가치 통제	당장의 생존(높은 시간 선호)	스마트폰·핀테크 보급	상인·개인의 달러 수용	발행사와 미 통화 정책에는 취약	달러 스테이블코인
베네수엘라 투메레모 (하이퍼인플레이션)	가치 통제	당장의 생존	전력·통신 인프라 열악	마을 상점의 금 수용	보관·운송 위험과 휴대성 제약	금
감시 자본주의·플랫폼 경제	감시 통제	상시(잠재적)	기술 이해·도입 장벽	좁은 이용자층	익명성은 얻되 편의와 합법 결제 접점을 잃음	프라이버시 기술·현금

맺음말

개인과 권력체 간의 제도적 거리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디지털 기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첨예해지고 있다. 현금이 사라지고 결제가 모두 전산망 위로 올라오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사는지 실시간으로 남고, 감시 자본주의는 소비와 관심의 영역까지 데이터로 포착하면서, 제도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권력의 도구는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거리를 되넓히려는 저항력도 자라나고 있다. 영지식 증명과 프라이버시 코인은 감시 통제에 맞설 익명성을 키우고, 자기수탁은 개인이 직접 키를 쥐고 거래할 여지를 넓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무너진 자국 화폐의 대안을 더 많은 사람이 쫓 수 있게 한다.

결국 앞으로를 가르는 것은 어떤 화폐가 이기느냐가 아니다. 권력이 거리를 좁히는 속도와 개인이 그 거리를 되넓히는 속도 가운데 어느 쪽이 앞서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개인이 스스로 거리를 조절할 여지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다. 저항의 화폐의 앞날은 특정 자산의 시세가 아니라, 이 거리를 둘러싼 힘의 균형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저항의 화폐를 하나의 이름으로 못 박을 수는 없다. 권력이 개인의 삶을 죄어 오는 한, 그리고 그 압박을 벗어나려는 개인이 있는 한, 금이든 달러든 비트코인이든 아직 이름조차 없는 무엇이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면 저항의 화폐가 된다. 저항의 화폐는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새로 쓰이는 가능성의 이름이다.

1. Andrew M. Bailey, Bradley Rettler, and Craig Warmke, *Resistance Money: A Philosophical Case for Bitcoin* (New York: Routledge, 2024).
2. World Bank,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25: Connectivity and Financial Inclusion in the Digit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2025),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findex>, accessed 25 Apr. 2026.
3. Neil Monnery, *Architect of Prosperity: Sir John Cowperthwaite and the Making of Hong Kong* (London: London Publishing Partnership, 2017).
4. Tatiana Kostova, "Transnational Transfer of Strategic Organizational Practices: A Contextua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 no. 2 (April 1999): 308–24.
5. People's Bank of China, *Progress of Research & Development of E-CNY in China* (Beijing: PBOC, July 2021), <https://www.pbc.gov.cn/en/3688110/3688172/4157443/4293696/2021072014364791207.pdf>, accessed 25 Apr. 2026.
6. Central Bank of The Bahamas, "Project Sand Dollar," <https://www.sanddollar.bs/>, accessed 25 Apr. 2026; European Central Bank, "Digital Euro," https://www.ecb.europa.eu/euro/digital_euro/html/index.en.html, accessed 25 Apr. 2026;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 2025년 10월,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2/view.do?menuNo=200725&nttId=10094317>, accessed 24 Jul. 2026.
7. Yomi Kazeem, "How Bitcoin Powered the Largest Nigerian Protests in a Generation," *Quartz Africa*, October 26, 2020, <https://qz.com/africa/1922466/how-bitcoin-powered-nigerias-endsars-protests>, accessed 25 Apr. 2026.
8. GoFundMe, "Statement on the Freedom Convoy 2022 Fundraiser," February 4, 2022; "Ontario Court Freezes Access to Funds Raised for Protest Convoy on GiveSendGo Platform," *CBC News*, February 10, 2022,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freedom-convoy-2022-donations-frozen-give-send-go-1.6347345>, accessed 23 Jul. 2026. 긴급조치법 발동일은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February 14, 2022 Declaration of Public Order Emergency," <https://www.justice.gc.ca/eng/csj-sjc/section58.html>, accessed 23 Jul. 2026 참조. 동결 규모에 관해서는 "Banks Have Started to Freeze Accounts Linked to the Protests, Freeland Says," *CBC News*, February 17, 2022, <https://www.cbc.ca/news/politics/ottawa-protests-frozen-bank-accounts-1.6355396>, accessed 23 Jul. 2026 참조. 재무부는 하원 위원회에서 긴급조치법의 금융 조치로 동결된 계좌를 최대 210개, 약 780만 캐나다 달러로 보고했다.
9. David Fraser, "Digital Currency Donations for Freedom Convoy Evading Seizure by Authorities," *CBC News*, March 21, 2022, <https://www.cbc.ca/news/canada/ottawa/freedom-convoy-cryptocurrency-asset-seizure-1.6389601>, accessed 25 Apr. 2026.
10. Emergency Economic Measures Order, SOR/2022-22, *Canada Gazette*, Part II, vol. 156, Extra no. 1 (February 15, 2022), ss. 2(1)(c), 3(k), <https://gazette.gc.ca/rp-pr/p2/2022/2022-02-15-x1/html/sor-dors22-eng.html>, accessed 10 Jul. 2026; Alexandra Posadzki, James Bradshaw, and Temur Durrani, "RCMP Identify Dozens of Financial, Crypto Accounts Tied to Convoy Protests," *Globe and Mail*, February 16, 2022,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rcmp-asks-cryptocurrency-exchanges-to-halt-trading-for-accounts/>, accessed 10 Jul. 2026.
11. *Li v. Barber*, 2022 ONSC 1176 (Ont. Sup. Ct. J., February 17, 2022); Annabel Oromoni, "Freedom Convoy Crypto Holdings to Remain Frozen and in Escrow Pending Lawsuit by Ottawa Residents," *Law Times*, March 2, 2022, <https://www.lawtimesnews.com/news/general/freedom-convoy-crypto-holdings-to-remain-frozen->

and-in-escrow-pending-lawsuit-by-ottawa-residents/364490, accessed 10 Jul. 2026; Nunchuk (@nunchuk_io), 온타리오 상급법원에 보낸 회신 공개, X, February 18, 2022, https://x.com/nunchuk_io/status/1494885897577271299.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동결 대상으로 삼은 마레바 금지명령은 캐나다에서 보고된 최초 사례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Mark Jewett, Simon Grant, and Joseph Blinick, “Mareva Injunction over Cryptocurrencies in the Freedom Convoy Class Action,” Bennett Jones, March 1, 2022.

12. Andrea O’Sullivan, “Hong Kong Protests Show Dangers of a Cashless Society,” *Reason*, July 2, 2019, <https://reason.com/2019/07/02/hong-kong-protests-show-dangers-of-a-cashless-society/>, accessed 17 Jul. 2026; Leigh Cuen, “Global Protests Reveal Bitcoin’s Limitations,” *CoinDesk*, November 21, 2019, <https://www.coindesk.com/tech/2019/11/21/global-protests-reveal-bitcoins-limitations>, accessed 17 Jul. 2026.
13.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과 공식 채택 사례에 관해서는 Åke Lönnberg and Luis I. Jácome, “Implementing Official Dollarization,” IMF Working Paper WP/10/106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2010), <https://doi.org/10.5089/9781455200658.001.A001>, accessed 17 Jul. 2026 참조. 짐바브웨의 비공식 달러화와 2009년 2월 다중통화제 공식화에 관해서는 Vitaliy Kramarenko et al., “Zimbabwe: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after Hyperinflation”, IMF Departmental Paper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une 2010), <https://doi.org/10.5089/9781462309184.087.A001>, accessed 17 Jul. 2026 참조.
14.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n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9: The New Global Financial Context: Effects and Transmission Mechanisms in the Region* (Santiago: United Nations, 2019), 9, table 2, <https://repositorio.cepal.org/server/api/core/bitstreams/e0b0150e-8f00-4ca8-b276-298f49f207a7/content>, accessed 23 Jul. 2026.
15. Alex Vasquez and Ezra Fieser, “Venezuelans Break Off Flakes of Gold to Pay for Meals, Haircuts,” *Bloomberg*, October 20, 20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0-20/venezuelans-break-off-flakes-of-gold-to-pay-for-meals-haircuts>, accessed 25 Apr. 2026.
16.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INDEC), *Índice de precios al consumidor (IPC)*, Diciembre 2023 (Buenos Aires: INDEC, January 2024), https://web.archive.org/web/20241112210626/https://www.indec.gob.ar/uploads/informesdeprensa/ipc_01_24DBD5D8158C.pdf, accessed 25 Apr. 2026. 2023년 12월 12개월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211.4%.
17. 페소 환율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공식 기준으로 2014년 말 달러당 약 8.5페소, 2024년 말 약 1,031페소다. 개인의 달러 매입을 월 200달러로 묶은 환전 규제(cepo cambiario)는 2019년 9월 도입되어 2025년 4월 해제되었다.
18. Chainalysis Team, “Latin America Emerges as a Crypto Powerhouse Amid Volatile Growth,” Chainalysis, October 2, 2025, <https://www.chainalysis.com/blog/latin-america-crypto-adoption-2025/>, accessed 30 May 2026.
19. Reserve Bank of India, *Macroeconomic Impact of Demonetisation: A Preliminary Assessment* (Mumbai: RBI, March 2017), 1, <https://rbidocs.rbi.org.in/rdocs/Publications/PDFs/MID10031760E85BDAFEFD497193995BB1B6DBE602.PDF>, accessed 25 Apr. 2026.
20.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2019).
2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Treasury Sanctions Notorious Virtual Currency Mixer Tornado Cash,” press release JY0916, August 8, 202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916>, accessed 27 Jul. 2026; U.S. Attorney’s Offic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Founders and CEO of Cryptocurrency Mixing Service Arrested and Charged with Money Laundering and 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Offenses,” press release, April 24, 2024,

<https://www.justice.gov/usao-sdny/pr/founders-and-ceo-cryptocurrency-mixing-service-arrested-and-charged-money-laundering>, accessed 27 Jul. 2026.

22. zkSNACKs, “zkSNACKs Is Discontinuing Its Coinjoin Coordination Service 1st of June,” May 2, 2024, <https://web.archive.org/web/20241007122748/https://blog.wasabiwallet.io/zksnacks-is-discontinuing-its-coinjoin-coordination-service-1st-of-june/>, accessed 27 Jul. 2026. 코디네이터 운영 중단은 2024년 6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3. Van Lo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5th Cir., November 26, 202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rnado Cash Delisting,” press release SB0057, March 21, 2025,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057>, accessed 27 Jul. 2026.
24. United States v. Rodriguez and Hill, No. 1:24-cr-00082 (S.D.N.Y.). 두 사람은 2025년 7월 30일 유죄를 인정하고 같은 해 11월 각각 60개월과 48개월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United States v. Roman Storm, No. 1:23-cr-00430 (S.D.N.Y.). 2025년 8월 6일 배심원단은 무면허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에만 유죄를 평결하고 자금세탁 공모 및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서는 평결에 이르지 못했으며, 검찰은 2026년 3월 평결이 나오지 않은 두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25. Mancur Olson, “Dictatorship, Democracy, and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no. 3 (September 1993): 567–76.
26.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27.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no. 2 (March 1979): 263–91.
28. Tavneet Suri and William Jack, “The Long-Run Poverty and Gender Impacts of Mobile Money,” *Science* 354, no. 6317 (December 9, 2016): 1288–92, <https://doi.org/10.1126/science.aah5309>.
29. 「‘가상자산 패닉’… 비상계엄에 국내 거래소도 멈췄다」, *ZDNet Korea*, 2024년 12월 3일, <https://zdnet.co.kr/view/?no=20241203231615>, accessed 23 Jul. 2026; 「尹 ‘비상계엄’ 선포에 비트코인·리플·도지코인 업비트서 일제히 폭락」, *디지털애셋*, 2024년 12월 4일,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3759>, accessed 23 Jul. 2026. 시세는 업비트 기준.
30. 테더는 법 집행기관의 요청과 OFAC 제재 지정에 따라 특정 주소를 동결해 왔으며, 누적 동결 규모는 테더 발표 기준 44억 달러를 넘는다. 서클 역시 법원 명령이나 제재 지정에 근거해 USDC 주소를 차단해 왔다. Tether, “Tether Supports Freeze of More Than \$344 Million in USD₮ in Coordination with OFAC and U.S. Law Enforcement,” <https://tether.io/news/>, accessed 23 Jul. 2026.



저항의 화폐는 어떻게 선택되는가

Researcher

이창준 Changjun Lee johan000623@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오태민 Taemin Oh

Editor

손혜민 Hyemin Son
